

인도 ‘Make in India’ 정책 성과가 2019년 총선에 미칠 영향은?

임정성 수석연구원, 철강연구센터 (jsimm@posri.re.kr)

목차

1. ‘Make in India’ 정책 개요
2. ‘Make in India’ 정책 성과 평가
3. ‘Make in India’ 성과 부진 여파
4. 2019년 인도 총선 전망
5.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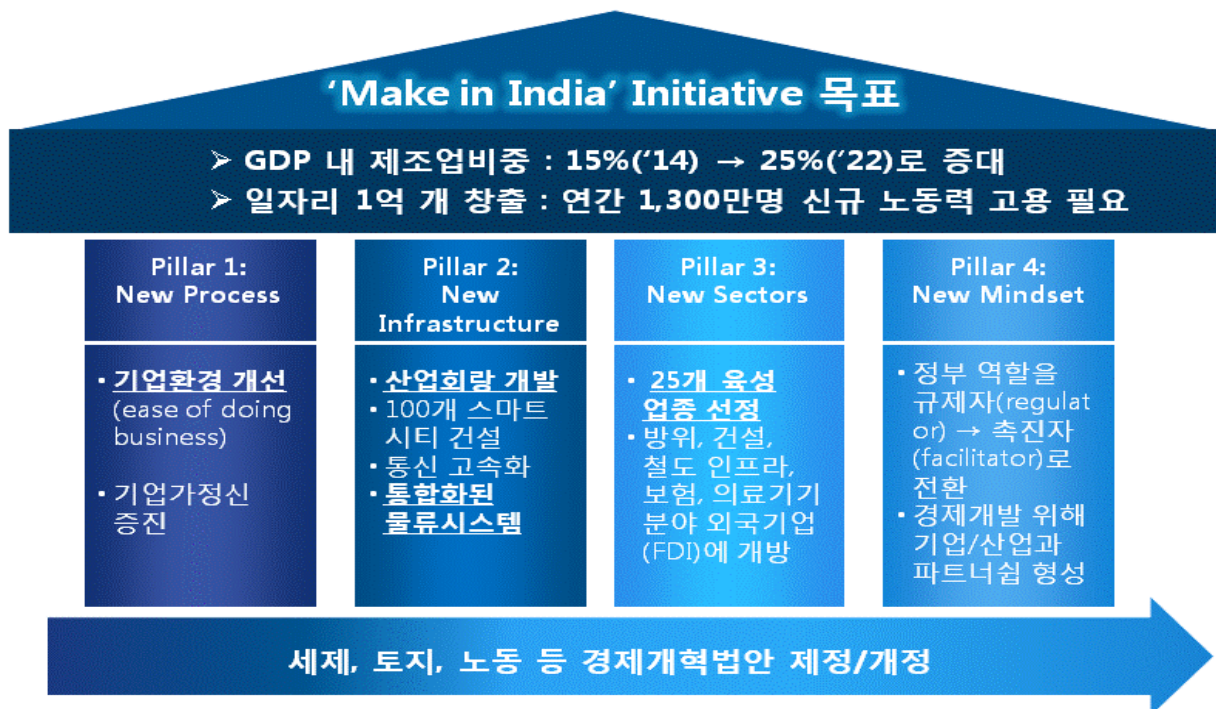
Executive Summary

- 인도 'Make in India' 정책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났고, 금년 4~5월로 예정된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그동안의 성과 검토가 필요
 - 인도 모디총리의 대표적인 정책인 'Make in India'의 2대 목표는 제조업 비중을 15%('14)에서 25%('22)로 높이고, 1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
 - 이를 위해 New Process(사업환경 개선), New Infrastructure(물류개선), New Sectors(25개 업종 육성), New Mindset(정부역할 전환)으로 구분하여 추진
- 'Make in India' 정책의 성과를 보면, 사업환경 개선 노력과 국내외 투자 증대 실적은 있었지만 제조업 비중 확대와 고용창출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함
 - 사업용이성 평가 상승(130위권→77위), FDI 규제 완화, 단일세제법(GST) 시행, FDI 유입액 급증(연간 U\$3000억대 → '16년부터 U\$6000억대) 등의 성과
 - 그러나 GDP 내 제조업 비중이 '15년 16.8%에서 '18년 상반기 16.9%로 정체되었고, 실업률은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서민과 청년층의 불만 고조
- 한편, 모디총리 지지율이 4년간 50%가 넘어 재집권이 당연시되었고 'Make in India' 정책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'18년 들어와 기류가 변함
 - 최근 주의회 선거 참패에는 무슬림 등 非힌두는 물론 농민, 영세상공인, 젊은층 중심으로 모디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'Make in India' 정책에 대한 반감 확산도 작용
 - 이에 모디총리는 1월말 발표한 '19년도 예산안에서 농민과 서민 유권자를 위한 선심성 조치를 내렸고 경제약자층 대상의 10% 할당제도 즉각 실시
 - 현 시점에서 전망해 보면, 여당이 '14년과 같은 압승은 못 거두더라도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는데, 근거로는 ①연방정부 선거에서는 지역정당보다 중앙정당 선호 ②이전 정권에도 연임 기회 부여 ③네루간디 가문에서 또 한 명의 총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반발 ④캠페인의 달인인 모디총리의 선거전술과 연설력 등
- 기업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'19년 인도총선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당분간 중요한 의사결정은 보류하고 Wait & See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
 - 여당인 BJP 재집권 시 경제개혁 가속화를 전제로 기존 법인의 안정성과 추가 성장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검토할 필요
 - Congress 집권 성공 시에는 정치경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은 기존 법인을 현상 유지시키고 투자계획 추진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1. 'Make in India' 정책 개요

- 인도 모디총리는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인도의 취약한 경제 및 산업구조를 변혁하기 위해 'Make in India' 정책을 제시함
 - 2014년 8월 15일 취임 후 처음 맞은 독립기념일 축하에서 발표된 'Make in India' 정책은 이후 발표된 Digital India, Skill India, Startup India 같은 정책과 연계되어 인도의 변혁과 성장을 촉진해옴
 - 'Make in India' 정책의 2대 목표는 '제조업 비중 확대'와 '일자리 창출'
 - GDP 내 제조업 비중을 '14년 기준 15%에서 '22년까지 25%로 확대
 -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중국(40%)은 물론 태국(33%), 말레이시아(24%)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('17년 기준)
 - 향후 10년 동안 일자리 1억 개 창출(연간 약 1,000만 개)
 - 'Make in India' 정책은 New Process(사업환경 개선), New Infrastructure(산업회랑 개발, 물류개선 등), New Sectors(25개 업종 육성), New Mindset(정부 역할을 규제자에서 촉진자로 전환) 등 4대 기둥(pillar)으로 구성
 - 또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세제, 토지, 노동과 관련한 경제개혁 법안 개정을 추진
 - 'Make in India' 정책에서 선정한 25개 육성산업에는 순수 제조업종뿐 아니라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분야와 전략적 업종들이 포함됨
 - 제조업종에서는 섬유/의류, 가죽, 식품가공, 전자/기계, 자동차, 자동차부품, 화학, 제약(8개)
 - 인프라에서는 광산, 석유가스, 건설, 화력발전, 항만/선박, 철도, 도로(7개 업종)
 - 전략적 업종에서는 항공, 우주산업, 방산제조, 바이오기술, 전자시스템, IT&BPM(Business Process Management), 신재생에너지, 미디어/오락, 관광/숙박, 헬스(10개)
 - 참고로 철강은 25개 육성업종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2030년 3억톤의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'국가철강정책 2017'(National Steel Policy)을 통해 제조업과 인프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방침

〈인도 정부의 'Make in India' 정책 목표 및 구성〉



자료: Make in India 정책 내용 참조하여 저자 작성

□ 'Make in India'가 발표된 지 4년이 지났고 금년 4~5월로 예정된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그동안의 성과 검토가 필요

- 인도시장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확대와 현지법인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,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대비해 인도정부의 정책 성과와 정치환경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함

2. 'Make in India' 정책 성과 평가

□ 모디총리는 우선적으로 열악한 사업환경을 변혁하여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제조업 비중을 높여 신규고용을 창출한다는 논리로 접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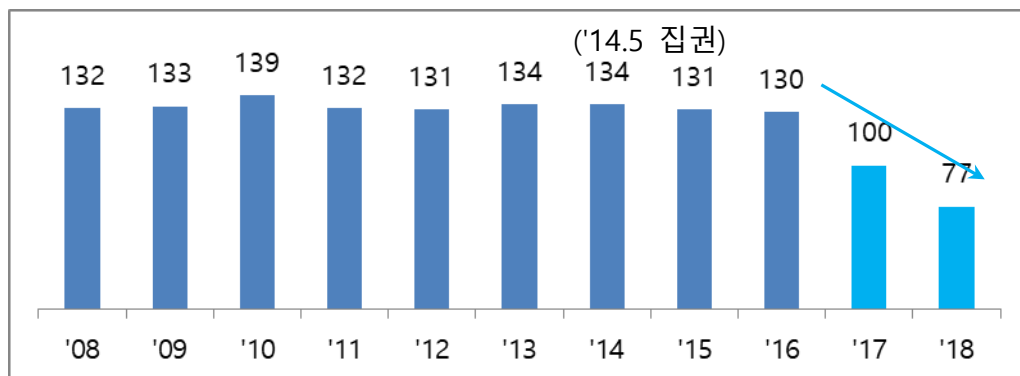
- 이에 따라 'Make in India' 정책의 4년간 성과 평가를 위해 1)사업환경 개선 노력 2)투자유치 실적 3)제조업 비중 및 고용창출 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함

1) 사업환경 변혁(Transformation) 노력: 모디정부는 기업투자환경의 실질적 개선과 제도/법률적 보완 통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함

○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, 수송 인프라를 개선하여 물류비 감축을 도모함

- 모디총리는 유세 시 공약한 3년 내 50위권 진입을 위해 별도 대응팀을 만들어 세계은행과 협력해옴. 이 결과 사업용이성(Doing Business) 순위가 종전 130위권에서 '17년 100위로 개선되었고, '18년에는 77위로 23단계 상승
- 대부분 항목에서 개선되었지만, '18년 평가에서 세계 최저수준을 보인 항목은 건설허가(181위), 계약이행(164위), 사업착수(156위), 재산등록(154위) 등

〈인도의 사업용이성 순위 변화(세계은행 평가)〉



주: 189개국 대상 평가 결과

자료: WB doing Business(2018)

- 인도 제조업 투자의 최대 애로사항인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도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왔고, 고속철도 건설과 산업회랑(Industrial Corridor)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 중

- 인도정부는 최근 '국가물류정책(NLP)'의 초안을 발표했는데, '18년 44위를 기록한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 순위를 25~3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
- 인도는 델리, 뭄바이, 첸나이, 콜카타 등 4대 광역도시를 도로, 철도, 산업회랑으로 연결하는 다이아몬드 사변형(Diamond Quadrilateral) 프로젝트를 추진
- 산업회랑은 총 5개*를 추진 중인데, 일본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가장 먼저 개시한 델리-뭄바이산업회랑(DMIC)이 지연되자 나머지 4개 산업회랑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토지수용난과 비용상승 문제 등으로 지연이 예상된다

* DMIC 이외 AKIC(암리차르~콜카타), BMEC(벵갈루루~뭄바이), CBIC(첸나이~벵갈루루), VCIC(바이작~첸나이)

○ 한편, 외국인직접투자(FDI)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제조업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개혁법 개정도 추진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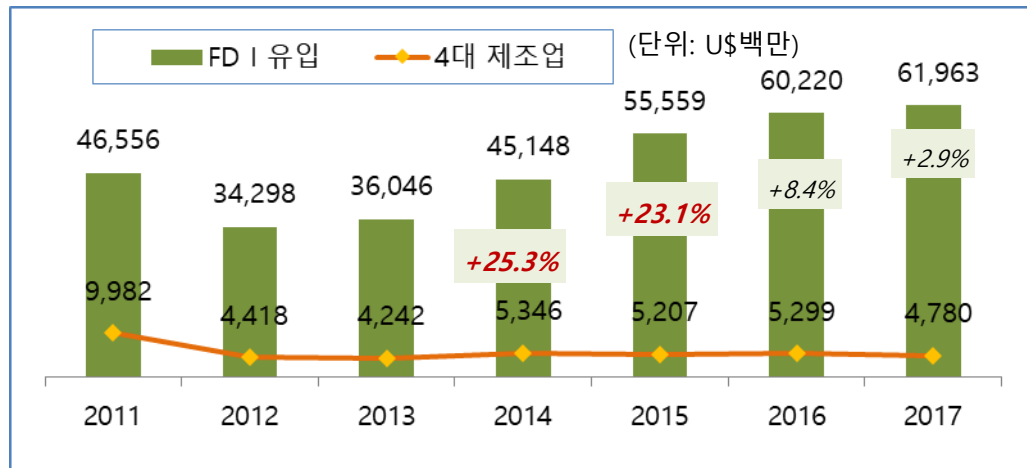
- 인도정부는 1991년 경제개혁개방 정책으로 선화하면서 지속적으로 FDI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, 모디정부 들어와 아주 민감한 분야까지 과감하게 개방

- 소매유통, 항공수송, 철도, 방위, 보험, 연금, 방송, 부동산 등 민감한 14개 업종에 대해 규제 완화를 단행하고 '세계에서 FDI에 가장 개방적인 국가'라고 자평
- 부가가치세를 단일화한 GST(Goods & Services Tax)는 집권 후 야당과 오랜 협상을 거쳐 '16년 말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'17년 7월부터 시행
 - GST 시행 전 기업들이 관망 자세를 보였고, 시행 후에도 일부 혼란을 겪어 경제에 쇼크를 주었으나, 인도시장을 실질적으로 '단일시장화'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
- 토지수용법과 노동법 개정은 야당과 농민, 노동조합의 강한 반대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는데, 이로 인해 대규모 인프라와 산업회랑 프로젝트가 지연되고, 노동집약적 제조업 투자도 미흡하여 고용 창출이 부진

2) 투자유치 실적: 'Make in India' 발표 이후 사업환경 개선 노력 등에 의한 투자심리 회복으로 국내외 투자가 증대됨

- 총고정자본형성은 '16년에 전년비 8.4% 증가하고, '17년에도 9.3% 증가하여 투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임
 - 뭄바이증권거래소 200대 회사(BSE 200)의 자본투자액도 '15년 3.28조 루피, '16년 3.96조 루피, '17년 3.96조 루피 등 고수준 기록
- 한편, 모디총리가 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하며 'Make in India' 비전을 제시하고 Democracy(민주주의), Demography(인구구성), Demand(수요), Deregulation(규제완화) 등 4D 장점을 설득해 외국인투자 유입이 급증
 - FDI 유입 증가율은 '14년 전년비 25.3%, '15년 23.1%로 급등했고, 연간 유입액은 종전 U\$3000억대에서 '16년부터 U\$6000억대로 증가
 - 그러나 업종별 유입을 보면 서비스업, 소프트웨어, 통신 등 서비스산업 분야가 많고, 자동차, 제약, 화학, 금속 등 제조업 비중은 10% 미만으로 여전히 낮아 제조업 투자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
 - 제조업 투자는 일본, 한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, 삼성전자 인디아는 '18년 7월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폰 공장을 건설하여 문재인대통령과 모디총리가 직접 준공식에 참여하기도 함
 - 최대 자동차사인 마루티스즈키는 '18년 165만대 판매에서 '30년 500만대를 목표로 투자계획을 진행하고 있고, 기아차도 최종 30만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

〈인도의 FDI 유입추이 변화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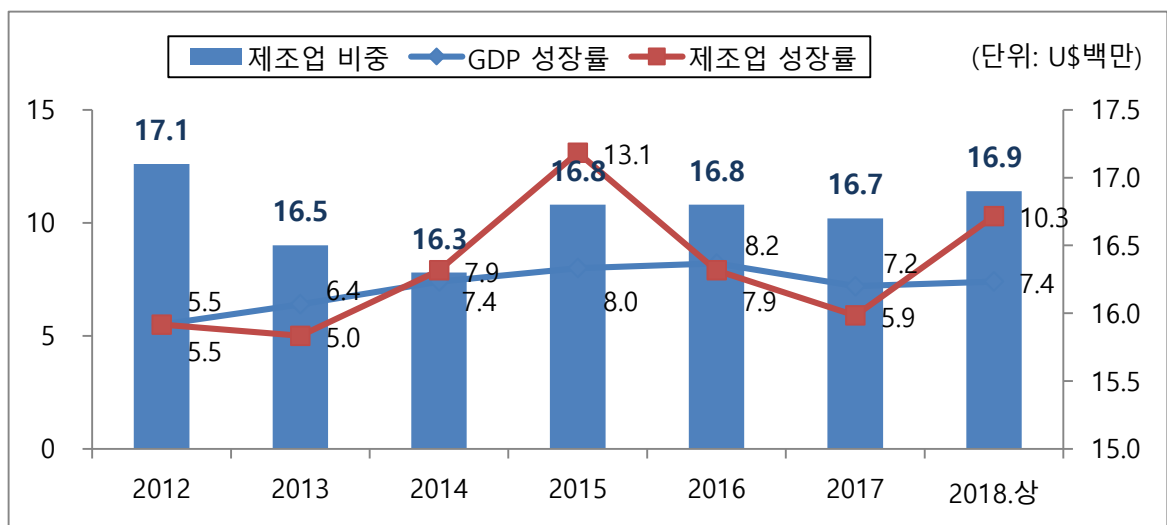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청(DPIIT)

3) 제조업 비중 및 고용창출 실적: 'Make in India' 정책 발표 후 4년이 경과했는데, 제조업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고 실업률이 상승

-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은 '15년 16.8%에서 '18년 상반기 16.9%로 정체된 상태
 - 제조업 비중이 정체된 이유는 제조업 성장률이 투자와 소비심리 개선으로 '15년 13.1%까지 급등했다가 '16년 11월 화폐개혁 조치와 '17년 7월 GST 시행으로 5.9%까지 하락했기 때문
 - 또한 GDP 내 비중이 53%나 되고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고성장('11~'17년 연평균 8.6% 성장)을 지속하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 증대가 어려움

〈인도의 제조업 성장률 및 비중 추이〉



자료: 인도 통계청(CSO)

- 한편, 모디총리는 지난 1년간 1,0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과시했지만, 최근 실업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
 - 모디는 공식분야에서 일자리가 700만 개 이상 창출됐고, 인프라/건설과 관광분야의 비공식 일자리를 포함할 경우 1,000만 개 이상 창출됐다고 주장
 - 그러나 금년 2월에 보도된 일부 언론에 따르면, '17년 실업률이 6.1%를 기록해 4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(정부 공식 통계는 미발표 상태)
 - 이 중 15~29세 도시 거주 청년층의 실업률은 남자 18.7%, 여자 27.2%로 심각한 정치사회 이슈가 되고 있음
 - 매년 1,300만 명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고, 이 중 1/3이 대졸 이상으로 '공식분야'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데다 공장 자동화 등으로 고용인원이 많지 않아 실업률이 상승
 - 참고로 인도는 10인 이하 사업장을 의미하는 비공식분야(unorganized sector, 주로 영세상인, 농어민)가 고용의 83%를 담당

□ 평가 종합: 한 국가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, 정책 목표 기간도 '22년까지로 되어 있어 'Make in India' 성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임

- 실업률 상승세는 우려되는 점이지만, 인도 경제와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파하고 제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과 Action Plan을 실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
 - 특히 모디총리가 고질적인 후진관행 철폐와 단일시장화를 위해 화폐개혁과 GST 시행이라는 엄청난 개혁정책을 추진한 결과 'Make in India'에도 일시적인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
- IMF, ADB 등 국제기관과 외국기업들은 모디총리의 과감한 개혁 노력과 'Make in India'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도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, 인도 야당과 국민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
 - IMF 총재는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과 사업환경 개선 노력, GST와 파산법 실행을 높이 평가하며, 노동법 개정과 토지개혁 등 추가 성장 촉진책을 주문
 - 반면, 국민회의당의 간디 총재는 모디총리의 4년간 성적표를 제시했는데, 농업, 외교, 연료가격, 일자리창출은 F, 슬로건 만들기과 자기과시는 A+로 평가
 - 인도 국민은 여론조사에서 모디정부가 시행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'보조금 직접 지급'(58%)을 꼽았고, 이어 Clean India(19%), 전국민 금융접근(14%), Make in India(9%) 순으로 답변

3. 'Make in India' 성과 부진 여파

□ 모디총리의 지지율이 취임 후 4년간 50%가 넘어 2019년 총선에서 당연히 재집권하고 경제개혁과 'Make in India'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'18년부터 기류가 변하기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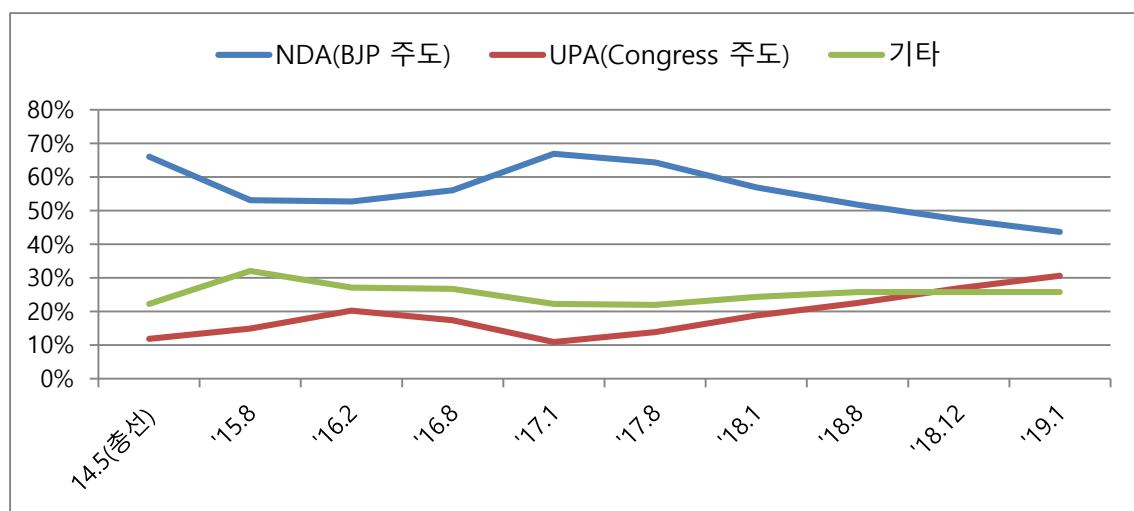
○ 여론조사에서 여당(인도국민당(BJP))과 모디총리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, '17년 말 구자라트 주선거에서부터 이상 조짐이 나타남

- 구자라트주는 모디총리가 13년간 주총리로 통치하면서 친산업 정책을 펼쳐 고도의 경제성장 수혜를 본 주인데, '17년 말 치른 주의회 선거에서 49% 지지율로 신승(辛勝)을 거둬(제1 야당 국민회의당(Congress) 지지율 41%)

- '18년 11~12월에 치러진 5개 주선거에서도 큰 이변이 나타남. 즉, 힌두민족주의 성향의 BJP가 집권했던 라자스탄, 차티스가르, 마드야프라데시 등 소위 힌두벨트(Hindu Belt) 3개 주에서 패배하여 큰 충격을 줌

· 이외 텔렝가나와 미조람 주에서는 각각 지역정당이 승리

〈India Today 실시 지지정당 여론조사 결과 추이〉



자료: Wikipedia

□ 최근 주의회 선거 결과의 배경에는 모디총리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'Make in India' 정책에 대한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

○ 모디총리는 '14년 총선 유세에서 '22년까지 농가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으나 '14~'15년 2년 연속 극심한 가뭄을 겪은 데다 '18년에도 작황이 부진하여 소득 감소 및 부채 증가로 불만이 고조

- '18년 말에는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수만 명의 농민들이 수도인 델리로 올라와 집회를 갖고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을 벌이기도 함
- 인도 농업은 몬순 강수량에 크게 의존하는 천수답 농사, 양파 등 필수 작물의 반복되는 가격 폭락 또는 폭등, 낙후한 농산물 유통구조와 물류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제조업이나 전체 경제성장률에 비해 성장률이 낮음
 - 농업 성장률: $\Delta 0.2\%$ ('14)→ 0.6% ('15)→ 6.3% ('16)→ 5.0% ('17)→ 4.6% ('18.상)
- 영세상공인은 '16년 11월 갑작스러운 화폐개혁으로 현금 장사에 큰 타격을 입은 데다 '17년 7월 GST가 시행되면서 경제활동이 둔화돼 두 번의 타격을 입음
 - 또한 모디총리가 'Digital India' 정책을 통해 전자상거래 확대를 도모하고, 외국기업에 소매유통 부문을 100% 개방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음
- 한편, 젊은 층은 모디총리의 약속과 달리 'Make in India' 정책 추진에도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여 취업이 안되자 불만이 고조
 - 이번 총선의 총 유권자 8억 7,800만 명 중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청년층 유권자는 1억 명 이상으로, 대부분 유동표가 될 가능성이 높음

4. 2019년 인도 총선 전망

- 인도정부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월말 발표한 2019 회계연도('19.4~'20.3) 예산안에 선심성 조치를 대거 포함함
 - 소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연소득 350천 루피 이하에서 500천 루피 이하로 조정하고, 근로 소득자에 대한 기본소득공제 상한을 기존 40천 루피에서 50천 루피로 확대
 - 영세 농가에 연간 6천 루피의 보조금 지급(대상자 1억 2,000만 명)
 - 이외 IT 공공부문에서 120만 명 고용, 향후 5년간 10만 개 마을 디지털화 계획, 공공의료정책 예산 3배 증액 등이 포함
 - 예산안과 함께 총선을 겨냥해 '인도 2030 비전'을 새롭게 제시하기도 함
 - ①U\$10조 경제규모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②'디지털 인디아' 가속화 ③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과 환경오염 없는 국가건설 ④산업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양산 ⑤깨끗한 강과 철저한 수자원 관리 ⑥연안개발계획 지속 ⑦우주개발 ⑧농업 발전 ⑨'헬스 인디아' 추진 ⑩최소 정부와 최대 거버넌스 구현

□ 또한 금년 1월에 경제적 약자층 대상으로 국립대학과 공무원 일자리 10%를 할당하는 법률 시행에 들어감

- 중상위 카스트(브라만, 크샤트리아, 바이샤) 중 저소득층이 경제적 약자층에 해당되는데, 약 1억 9,00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
- 참고로 인도는 이미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입학 정원과 공무원 일자리의 49.5%를 할당하는 법률을 시행 중임
 - 쿼터비율: 지정카스트(불가촉천민) 15%, 지정부족 7.5%, 기타하층계층(OBC) 27%

□ 앞으로 모디총리는 재집권을 통해 'Make in India'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약속하며 선거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

- 현 시점에서는 BJP 주도의 정당연합인 NDA(국민민주연합)가 '14년 총선과 같은 압승은 못 거두더라도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
 - 전망 근거로는 ①연방정부 선거에서는 지역정당보다 중앙정당 선호 ②이전 정권인 Congress 주도 연정에도 연임 기회 부여 ③ 네루간디 가문에서 또 한 명의 총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젊은 층 중심의 반발 ④선거 캠페인의 달인인 모디총리의 선거전술과 연설력 등
- 반면, 절치부심한 Congress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BJP에 대항한 선거 전략으로 주선거에서 성공했지만 간디의 행정 경험 부족 등 약점 보유
 - 명문 정치가문의 '도련님' 이미지를 가졌던 라훌 간디는 이제 48세의 성숙한 모습으로 발로 뛰는 선거유세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방정부 장관이나 주총리와 같은 행정 경험이 전무

5. 시사점

□ 모디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면 'Make in India'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

- 이미 'Make in India 2.0' 정책을 수립 중인 모디총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관장 부서를 명확히 하고 업종명을 구체화하며, 고용창출 확대 목적으로 전통적 강점 분야인 서비스 업종을 대거 추가할 계획
 - 의료기기, 자본재, 석유화학, 신발, 보석가공 등의 제조업종이 추가되고,

의료관광, 수송/물류, 회계/재무, 영상/음향, 법률, 커뮤니케이션, 건설/관련 엔지니어링, 환경, 금융, 교육 등의 서비스 업종이 추가 예정

- 또한 인도정부는 금년 1월에 이미 휴대폰 등 전기전자와 전기차 등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세율을 조정할 바 있음

○ 다만, BJP가 단독 정권 창출에 실패할 경우 소수 정당들과 연합해야 하기 때문에 모디총리의 정치 리더십이 약화될 우려가 있지만, 'Make in India' 등 기존 정책의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

- 모디총리가 재집권하면 Post-China 시장을 모색하는 외국인 투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인도 경제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
- 또한 상원 의석 점유율이 점차 높아져 토지수용법과 노동법 등 중요한 경제개혁 법안 도입에 유리해질 수 있음

□ 반면, Congress 집권 성공 시에는 세속주의 강화와 친서민/친약자 정책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

○ 정권 교체 시에는 단기적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, 포괄적성장을 지향하는 강령으로 인해 경제성장률도 5~6%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

- 속도는 느려지지만 13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인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발과 제조업 성장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임

□ 기업들은 '19년 인도총선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당분간 중요한 의사결정은 보류하고 Wait & See 자세를 견지해야 함

○ 모디총리 재집권 시에는 경제개혁 가속화를 전제로 기존 법인의 안정성과 추가 성장기회 포착 차원에서 투자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○ Congress 집권 시에는 정치경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은 기존 법인을 현상 유지시키고 투자계획 추진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[참고자료]

[보고서]

이웅 외, '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·인도 협력방안', KIEP 연구보고서, 2017.12.27

[정기 간행물]

IMF, India Staff Report for the 2018 Article IV Consultation, July 2, 2018

KIEP, '신남방시대, 인도 모디노믹스 성과와 한·인도 협력과제', 오늘의 세계경제, 2018.7.2

KOTRA, '인도 2019년 중앙정부 임시 예산안 내용 및 시사점', 2019.2.9

POSRI Chindia Plus, '인도 주의회 선거 결과', Vol. 133, 2019.1/2월호

[홈페이지]

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청(DPIIT) 홈페이지(<https://dipp.gov.in/publications/fdi-statistics>)

인도 상공부 산하 Make in India 홈페이지(<http://www.makeinindia.com>)

인도 상공부 산하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(IBEF) 홈페이지(<https://www.ibef.org/>)

인도 통계/정책이행부 통계청(CSO) 홈페이지(<http://www.mospi.gov.in/>)

Wikipedia Opinion polling for the 2019 Indian general election
(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Opinion_polling_for_the_2019_Indian_general_election)

World Bank Doing Business Report 홈페이지(<http://www.doingbusiness.org/>)

[언론]

Financial Express, "Make in India 2.0 to focus on 10 champion sectors", 2018.1.29

India Today, "4 years of Modi Sarkar: Report card of promises kept", 2018.5.25

LiveMint, "The latest NSSO report creates opportunity for labour reform", 2019.2.4

LocalCircles, "Citizen Assessment of 4 Years of Modi Government", 2018.5.14

News 18, "On 4th Anniversary, Modi Govt Gets A+ from Rahul Gandhi in 2 'Subjects'", 2018.5.26

Times of India, "Job data's bad, but do not assume Modi will lose", 2019.2.3